

충남리포트 제96호

ChungNam Report

2014. 01. 27.

CONTENTS

〈요약〉

1. 물 자치의 필요성
2. 충청남도 유역관리 여건
3.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과제
4. 결론 및 정책제언

이제!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.

이상진

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선임연구위원, lsjin@cdi.re.kr

본 연구의 목적은 유역별 물관리 여건, 그리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체계구축 방안을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.

요약

- 본 연구는 변화하는 물관리 패러다임을 충족하고 다양한 물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유역주민 간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.
- 물 자치란 물 자체가 유역을 기반으로 형성하는 만큼, 유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단체,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해당유역의 물 이용권과 관리권을 갖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물 통합관리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.
- 이처럼 유역기반의 물관리 권한과 의무가 통합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, 법률적으로도 물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 간 분쟁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물관리 시책과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.
-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업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권한과 의무를 현실적으로 정리하여 중앙에서는 물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정책조정을 담당하고, 실제적인 물 이용과 관리 권한 등 세부적인 집행기능은 유역별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주민에게 이관시켜 유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물의 이용과 관리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역내 이해당사자 들의 다층적 거버넌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시행될 때, 그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.
 - 도민에게 필요한 물 자치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물 통합관리(이수·치수·환경)시행, 중앙부처의 물관리 일원화, 지방역량(예산, 인력, 기술) 강화 및 중앙정부의 물관리 기능 이양, 유역단위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요구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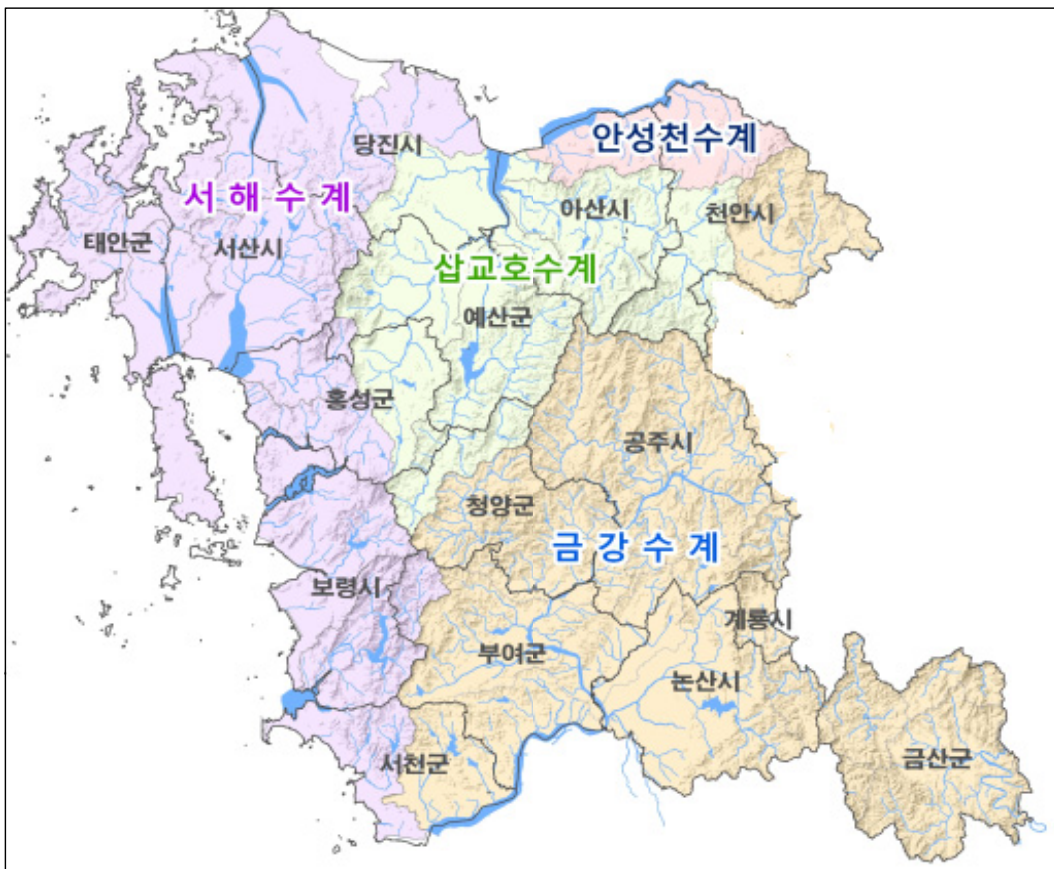
- 물은 생명체의 근원으로 깨끗한 물 확보가 유역주민에게 높은 관심사이다.
 -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인간생활은 물론 생태적으로도 많은 제약요인이 따른다.
 - 도시개발, 산업단지 및 수변공간 조성,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한 기관 및 단체, 유역주민 간 노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.
 - 최근, 물 값 상승과 가뭄에 의한 물 부족과 함께 다양한 용도의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의 사용 및 배분 그리고 수질오염에 따른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.

- 물은 유역주민들에게 다른 어떠한 자원보다 중요한 자원이다.
 - 물은 국가적으로 중요시 다루어야 할 대상임에는 이견이 없다.
 - 그러나 물은 유역주민들에게는 공동체로서 매개역할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 것이기 때문에 유역단위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.
 - 지방자치단체는 유역주민을 위한 물자치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, 단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의무만을 수행하는 체계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다.
 - 공공자원인 물은 해당 지역의 권리, 배분의 우선순위, 다른 유역으로 이동, 수질오염관리 비용, 홍수나 가뭄 피해예방 등 물 사용과 관리 전반에 대하여 해당유역의 주민이 주체적 이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.

- 유역 내 물에 대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물의 자치권은 유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견해가 반영될 때 성립된다.
 - 물에 대한 권리가 일차적으로 유역의 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유역주민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.
 - 동시에 물의 특성과 개념이 광역적이고 물에 대한 관리가 지역차원에서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으며,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유역주민이란 점을 감안한다면, 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.
 - 다만, 물 자체가 특정지역보다는 유역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, 유역에 해당하는 주민과 시민 단체, 지방자치단체 등의 견해가 함께 반영될 수 있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운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.

1) 하천 및 호소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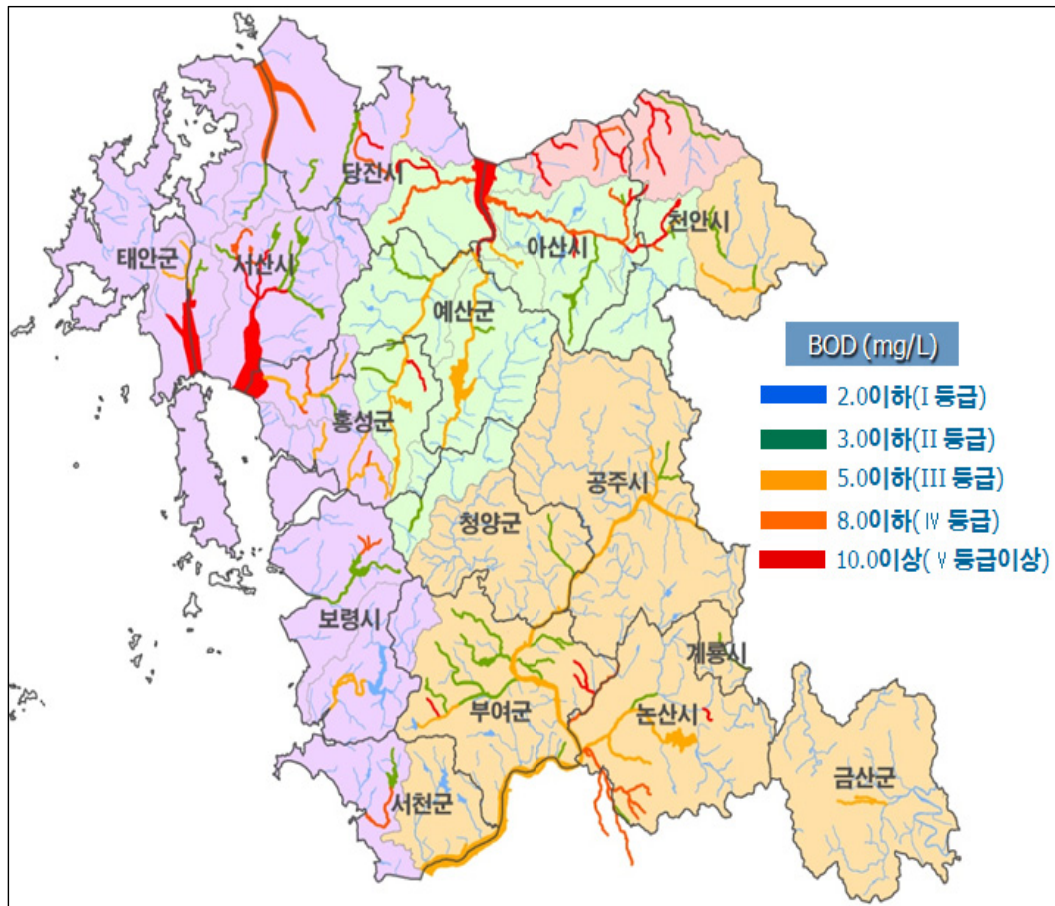
- 공공수역으로 4대수계에 536개소의 하천과 946개소의 호소가 있다.
 - 충청남도는 하천의 유역에 따라 금강수계, 삼교호수계, 서해수계, 안성천수계로 구분된다.
 - 하천 중에서 국가하천은 9개소(금강수계5, 삼교호수계3, 안성천수계1), 지방하천은 527개소(금강수계274, 삼교호수계95, 서해수계137, 안성천수계21)가 흐르고 있다.
 - 담수호 및 저수지의 규모별로 대형담수호 8개소, 저수지 222개소, 소규모 저수지는 716개소이다.



[그림 1] 충청남도 수계현황

2) 물 환경관리 현황

- 장마철 직전에 수량이 부족해지고, 동시에 수질오염농도가 높아진다.
 - 수량적으로 물이 부족한 시기는 당해 연도의 강수량에 따라 달라지지만, 4월부터 장마철 직전에 충남 북서부 서해안 수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. 이때 물의 절대량이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량이다.
 - 수질오염 등으로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수량의 관계로서 계절적 요인과 큰 관련성은 없으나, 주로 갈수기 등 유량이 적어지는 시기에 수질이 더욱 나빠지기 때문에 이시기에 삼교호 수계와 서해수계의 일부에서 쓸 수 있는 물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된다.
 - 하천 유역으로 보면 곡교천, 삼교천과 안성천, 강경천 등이 수질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며, 호소의 경우 간월호, 부남호, 삼교호 등을 비롯한 유역면적이 넓고 체류시간이 긴 연안지역의 담수호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.



[그림 2] 충청남도 주요하천 및 호소의 수질현황도

3) 유역관리 현상 및 물 분쟁

- 금강사업의 결과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.
 -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강사업은 국가하천이란 이유로 해당유역의 주민과 자치단체의견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, 정부주도의 대규모 사업이 단기간에 추진되었다.
 - 이로 인한 물고기 폐죽음, 생태서식지 훼손, 녹조현상 등의 심각한 문제와 시설물의 안정성, 운영관리 비용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.

- 중앙정부의 각종 사업이 유역주민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.
 -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댐 건설과 관련하여 서산·태안지역의 연안 물환경, 갯벌 보전, 생태계 등을 둘러싼 주민들과 사이에서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.
 - 최근 백제보의 물을 보령호(한국수자원공사 관리)로 이송시키고, 공주보의 물을 예당호(한국농어촌공사 관리)로 이송시키기 위한 사업계획과 충청남도 서해안권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천댐(청양군) 건설 계획 등이 중앙정부와 유역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.
 - 생활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역주민은 생태적 가치를 높이거나 문화, 경관, 수상레포츠 활동 등 지역발전과 함께할 수 있는 물 이용과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전망이다. 향후 생·공·농용수 수요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물 자원의 개발은 지속되기 때문에 해당유역의 주민, 자치단체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.

-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매우 높다.
 - 상수도 공급은 일차적으로 근거리(해당 유역)에서 다원적으로 수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며,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계를 달리하는 광역상수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.
 - 효율성을 강조한 공급위주의 정책에 따라 다른 유역의 물(광역상수도)을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매우 많다. 특히, 충청남도는 상수도의 공급량(광역 및 지방상수도) 중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84.2%로 전국 평균 26.8%에 비해 월등히 높아, 상수도 공급에 대한 자치노력이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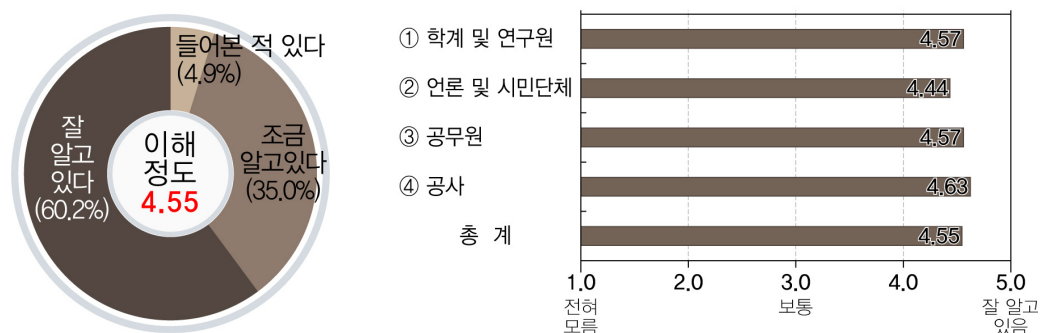
- 쓸 수 있는 물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유역주민의 노력이 절대적이다.
 - 곡교천, 삽교천, 안성천, 강경천 등이 수질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유역주민과 삽교호, 간월호, 부남호, 삽교호 등의 유역주민은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물 자원 확보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인 유역주민과 해당 자치단체는 주도적인 의사결정과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.

- 수질개선 사업이 유역의 주민과 유역자치단체의 의지보다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수리권 역시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물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자치노력이 절대적이다.

- 금강 물의 이용과 비용편익이 유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.
 - 금강의 중·하류는 대부분 충청남도 유역으로서 유역환경관리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, 금강물의 이용과 비용편익은 유역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.
 - 금강 상류의 물이용에 대한 편익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부분 귀속되고, 금강 중하류의 물이용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주도하고 있다.
 - 반면, 금강하구 및 금강 하류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금강하굿둑(해수유통 포함)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유역주민과 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물자치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결정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.

4) 유역관리에 대한 인식¹⁾

- 물 자원의 이용과 배분 등 물 관리나 수리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.
 - 물 자원의 이용과 배분, 치수와 물 환경관리 등 유역단위의 물 관리나 수리권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 물 관리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95.2% 정도가 잘 알고 있거나, 조금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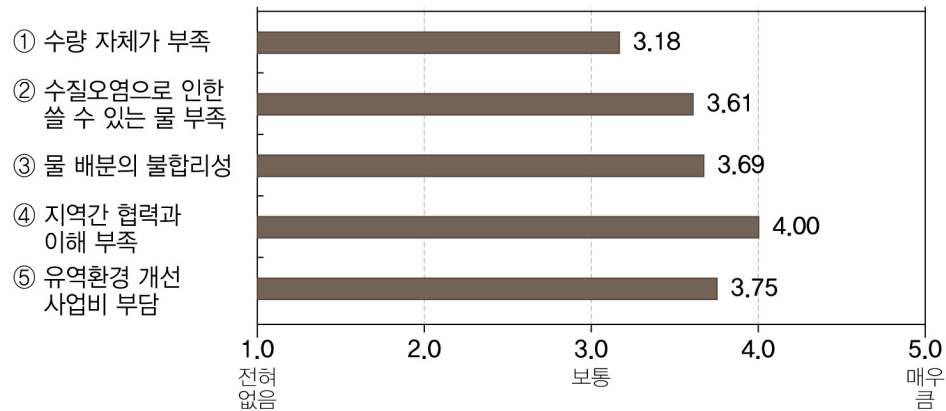


[그림 3] 물관리 갈등 및 직종별 인식도

- 물 분쟁은 수량 부족보다는 지역 간 협력과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.
 - 물의 이용과 관리에 따른 갈등의 주요원인으로는 지역간 협력과 이해가 부족이 가장 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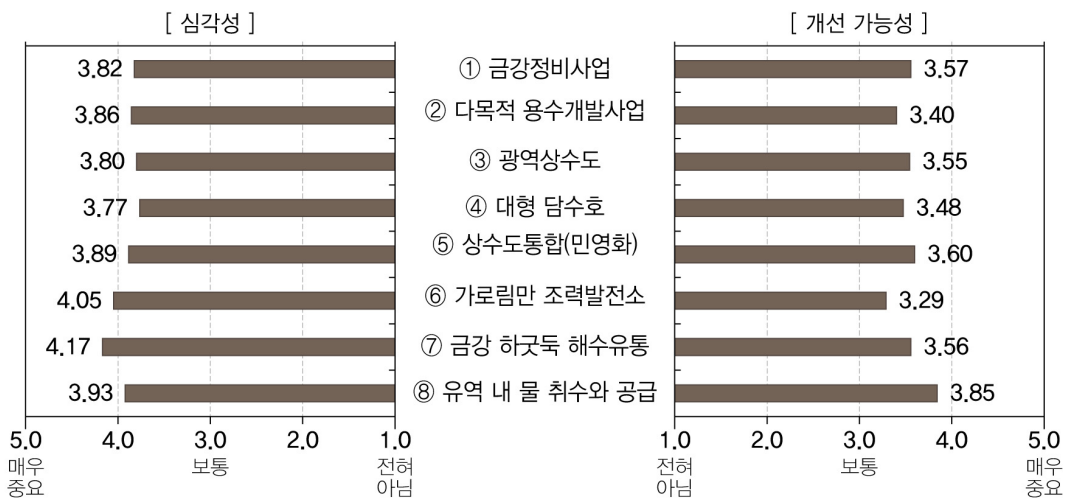
1) 설문조사는 2013년 9월에 학계, 연구원, 시민단체, 공사, 공무원 등 물 관련 관계자 10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.

영향으로 조사되었고, 유역환경 개선사업비 부담문제, 물 배분의 불합리성,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용용수 부족 등이며 수량자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.



[그림 4] 물 갈등 주요원인

-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이 가장 큰 갈등이고, 유역별 물 취수와 공급이 노력이 필요하다.
 - 물 분쟁대상 중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났고,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, 유역 내 물 취수와 공급, 상수도통합(민영화),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등의 순이었다.
 - 한편, 물 분쟁대상 사업 중 개선 가능성은 유역내 물 취수와 공급이 가장 높았고, 상수도 통합,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등의 순이었으나, 전문가와 공사관계자 간 집단적인 인식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었다.




[그림 5] 물 분쟁대상의 심각성과 개선가능성

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과제 ◀

03

- 물관리 방식은 중앙정부에서 유역 중심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.
 - 금강, 삽교천 등 국가하천과 대형 호소 등 중앙정부가 수리권(이수)과 치수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행사하고, 유역 자치단체는 하천과 호소유역에서 오염예방과 생태관리 등 의무를 부여 받고 있다.
 - 그간 생·공·농수의 공급은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왔으나, 물 관리 방식은 점차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,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추세이다.
- 유역의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가 필요하다.
 -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현상은 수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보다는 제도적인 결함으로 물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아서 발생하고, 유역 간 협력적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갈등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.
 - 그러나 최근에는 상류의 과대한 물이용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하류지역의 쓸 수 있는 물의 부족해지고, 오염된 물로 인해 생활권의 훼손에 대한 상·하류 간 갈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.
 - 이처럼 유역을 기반으로 한 물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통합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, 법률적으로도 수계단위의 물 자치권이 정립되지 않아서 다양한 형태로 이해당사자 간 혹은 유역 간 분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관리 시책과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.
- 물 자치권의 확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.
 - 첫째, 유역단위의 물 통합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.
 - 유역 내 통합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량과 수질관리의 통합이다. 수량과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구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에서는 일정부분 한계성을 갖는다.
 - 유역중심의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행정체계의 개편시 유역 단위 기반의 행정구역 획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, 궁극적으로는 유역단위의 특성에 맞도록 물 순환체계 전반을 통합하는 체계에 따라 설계하고 집행하여야 한다.

- 둘째, 물관리 관련 중앙부처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.
 - 중앙부처별 행정체계의 한계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관련 법률과 부처 간 물관련 업무의 기능조정을 통해 분절적 행정체계를 협력적·유기적으로 전환할 때, 물관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.
 - 중앙부처의 다원화 된 구조의 현실 속에 충청남도가 단순히 물관리 조직구조의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현재의 기능분담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정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높은 정책대안으로 판단된다.
- 셋째, 지방의 역량강화 및 중앙정부의 물관리 기능 이양이 요구된다.
 - 유역별 혹은 지방차원에서 자립적으로 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자원 및 인력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분담을 강요하거나 수혜자로부터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정부 예산과 인력 등 물관리 기능을 과감하게 이양함과 동시에 물관련 자원의 조달과 배분에 대한 개편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 - 현시점에서 유역별 물 관리 업무가 가능한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관련공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천유역별 통합조직을 설립(가칭 : 하천수계관리센터)하여 인력과 기술, 예산 등 물 관리전반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.
 - 물관리체계 역할분담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물관리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유역별 물관리 능력(예산, 인력, 기술)의 함양과 책임을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
- 넷째, 유역단위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.
 - 유역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,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유역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수량 및 수질관리의 통합은 가장 선행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물관리 거버넌스의 원칙이며, 이를 토대로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탈피하여 유역단위의 물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동시에 유역에 기반을 둔 유역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함은 물론 유역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시스템을 병행하는 물관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물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만큼 지방차원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며, 또한 물은 유역주민들에게는 공동체로서 매개역할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 것이다.
- 물은 자원으로써 이용뿐만 아니라 가치향상을 위한 수질오염관리 등의 주체가 가급적 동일시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. 따라서 물은 중앙정부나 중앙정부의 산하 공기업 등이 유역관리에 소홀히 한 채, 수리권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, 비록 법률에 따라 수리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도 유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다.
- 충청남도 금강유역은 금강사업으로 인한 물고기 폐죽음, 생태서식지 훼손, 녹조현상 등의 심각한 문제와 시설물의 운영관리 비용 및 물의 이용 등에 대한 갈등이 진행 중이다. 금강 중·하류는 대부분 충청남도 유역으로서 유역환경관리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강물의 이용과 비용편익은 충청남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. 또한, 삼교호, 금강하구호 및 간월호·부남호 등 수리권과 수질개선 방법 등이 유역에 위치한 유역주민과 해당 자치단체 보다는 중앙정부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.
- 물의 이용과 관리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유역주민, 시민단체, 지방자치단체 등 유역내 이해당사자 들의 다층적 거버넌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시행될 때, 그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. 물에 관한 한 기능별·목적별 행정기능을 유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결국,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여 할 수 있으며, 이는 곧 지방자치의 질적·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. 

이 상 진 선임연구위원
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
041-840-1271, lsjin@cdi.re.kr

※ 이 글은 ‘충청남도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 과제’(2013)의 연구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

◆ 참고 자료 ◆

- 김갑수, 1996, 대도시의 물관리실태 및 개선방안, 「환경정책」 제4권. 2호.
- 김인환, 1997, 물관리 체제의 효율화 방안, 「환경정책」 제5권. 1호
- 김종원 · 김창현 · 심우배,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연구, 국토연 2005-21.
- 미래기획위원회, 2009,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전략 구축방안 연구.
- 박성제, 2010, 수자원 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른 법 및 제도의 정비방안 연구, 국회입법조사처.
- 박종관 외, 2011,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경행정체계 발전방향 연구.
- 지속가능발전위원회, 2005,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.

충남리포트(2008~)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08-01	허베이 스피리트(Hebei Spirit)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	송두범	2008. 1.21
2008-02	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	강영주	2008. 2.22
2008-03	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	이충훈·권영현	2008. 3.19
2008-04	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	조봉운·송두범	2008. 5. 2
2008-05	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」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	송두범·강영주	2008. 5.27
2008-06	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	이관률	2008. 6.19
2008-07	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	신동호·강영주	2008. 7.30
2008-08	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	백운성	2008. 8.29
2008-09	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·군별 균형발전 평가	원종문·강영주	2008. 9.30
2008-10	「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」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	백운성	2008.10.30
2008-11	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	오용준	2008.11.28
2008-12	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	정옥식	2008.12.30
2009-01	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	강영주	2009. 1.30
2009-02	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	한상욱	2009. 2.24
2009-03	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	정종관	2009. 3.11
2009-04	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	전승수·한상욱	2009. 3.18
2009-05	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	오석민·한상욱	2009. 4.24
2009-06	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	이인배	2009. 5. 8
2009-07	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	임준홍	2009. 6.29
2009-08	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	이인배	2009. 7.23
2009-09	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	최인호	2009. 8. 6
2009-10	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	윤병선·유학열	2009. 9. 7
2009-11	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	임준홍·이상준외	2009. 9.30
2009-12	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	조한석·백운성	2009.10.30
2009-13	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	임형빈·유학열	2009.11. 9
2009-14	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!	김용웅	2009.11.18
2009-15	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	이재완·이관률	2009.12.11
2009-16	대전·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	류덕위·김양중	2009.12.31
2010-01	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	임준홍·조수희외	2010. 1.29
2010-02	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	김동준·김양중	2010. 2.24
2010-03	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-사회계정행렬(SAM)을 통한 분석	임재영	2010. 3.10
2010-04	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	이용재·임준홍	2010. 3.18
2010-05	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	이충훈·권영현	2010. 4. 5
2010-06	아·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	최병학	2010. 4.30
2010-07	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	김양중	2010. 5.10
2010-08	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	송두범	2010. 5.27
2010-09	대전·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	김동준·김양중	2010. 6. 3
2010-10	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	장동호·윤정미	2010. 6.21
2010-11	충남 귀농·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	유학열	2010. 8. 9
2010-12	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	신동호	2010. 8.16
2010-13	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(1998년-2007년)	임재영	2010. 8.19
2010-14	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	이인희	2010.10. 6
2010-15	사람중심,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	조명래·임준홍외	2010.10.29
2010-16	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	임준홍·김양중외	2010.11.09
2010-17	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	임형빈	2010.11.16
2010-18	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	오용준	2010.12.30
2011-01	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·군의 대응방안	한상욱	2011.01.13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11-02	2011년 충남의 GRDP 전망	김양중 · 이선희	2011.02.10
2011-03	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	이충훈	2011.03.31
2011-04	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	사공정희	2011.04.21
2011-05	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	임준홍 외3명	2011.05.02
2011-06	수질오염총량관리제!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	이상진 · 김영일	2011.06.23
2011-07	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	성태규외	2011.06.30
2011-08	충남 향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	임형빈	2011.07.11
2011-09	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	정옥식	2011.07.27
2011-10	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	성태규	2011.08.22
2011-11	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 · 협력 방안 연구	김양중	2011.10.31
2011-12	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	홍성호	2011.11.30
2011-13	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	이인희	2011.12.29
2012-01	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	김종수	2012.01.31
2012-02	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	신동호	2012.02.13
2012-03	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	김양중	2012.02.28
2012-04	2012년 충남 GRDP 전망	김양중	2012.02.28
2012-05	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	임형빈	2012.03.12
2012-06	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	송두범 · 김종수	2012.04.02
2012-07	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	김영일	2012.05.31
2012-08	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	조영재	2012.06.21
2012-09	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	전영노 · 백운성외	2012.08.10
2012-10	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	허남혁 · 정준	2012.08.16
2012-11	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	윤정미	2012.09.20
2012-12	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	정옥식	2012.10.31
2012-13	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	사공정희	2012.11.28
2012-14	한 · 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	김양중	2012.12.12
2013-01	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	홍성호 외	2013.02.21
2013-02	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	김양중	2013.03.07
2013-03	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	송두범 외	2013.04.19
2013-04	에코유지업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	여형범	2013.04.29
2013-05	충남지역 귀농 · 귀촌 실태 비교 연구	유학열	2013.05.10
2013-06	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	강마아 · 여민수	2013.07.10
2013-07	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	허남혁 외2명	2013.07.18
2013-08	대형마트 의무휴업, 그 후 1년;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	이민정	2013.08.09
2013-09	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	이관률	2013.08.23
2013-10	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-지역경제분야-	김양중	2013.09.02
2013-11	도 및 시 · 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	윤정미	2013.09.16
2013-12	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	김종화	2013.10.24
2013-13	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	이인희	2013.11.15
2013-14	유류사고 이후, 태안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산업 발전방안	김종화	2013.11.18
2013-15	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	백운성	2013.11.19
2013-16	충남 스포츠마케팅 추진방안과 과제	김경태	2013.11.20
2013-17	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	이관률	2013.11.21
2013-18	충청남도 소비의 선순환이 필요하다	김양중	2013.12.19
2014-01	동아시아 철새 보전, 서천갯벌에 달렸다	정옥식	2014.01.01
2014-02	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	이충훈	2014.01.09
2014-03	충남의 협동조합,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	송두범	2014.01.21

■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(www.cdi.re.kr)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,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!

■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,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